

'0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09. 1.

방송통신위원회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및 상대평가 실시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실시
 -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 강화
- 평가결과 정책개선 활용 등 평가의 내실화
 - 주요정책의 집행과정 및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정성평가 방법을 병용하여 원인분석, 대안제시 등을 통한 정책개선에 활용

(2) 평가추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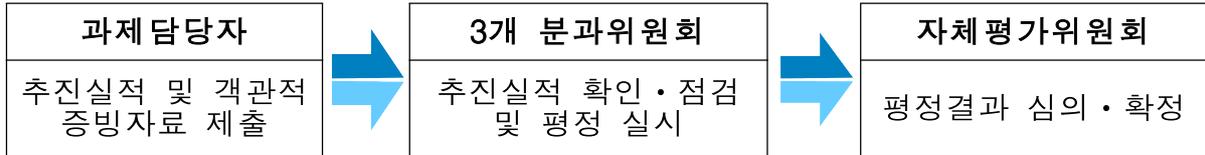
□ 평가추진 체계

- 효율적인 자체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내부 평가지원팀 등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상호 역할과 기능을 연계

추진체계		역할 및 기능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등 자체평가계획 심의 • 평가결과의 종합검토 및 조정 • 자체평가보고서 확정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분과별 소관 과제에 대한 평정
평가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계획 수립 • 평가지표 개발 등 자체평가활동 지원

□ 평가방법

- 분과위원회는 자체평가매뉴얼과 사전검토 및 객관적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46개 관리과제의 추진실적을 확인·점검 하고 평정 등급 부여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평정결과 최종 심의·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46개 관리과제, 93개 성과지표
- 평가지표 : 4개 평가항목, 6개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항목
공통 평가 지표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자율 평가 지표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 (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시행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정책 효과성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2. 평가결과 총평

(1) 평가결과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활기차고 품격있는 커뮤니케이션 일류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곁에 있듯 자연스럽게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융합의 확산과 촉진’ 등 5대 전략목표와 하위의 46개 관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 46개 관리과제별 평가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일정지연 및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음
- '08년도 21개 성과목표, 4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6개(13%), 다소우수 13개(28%), 보통 18개(39%), 다소미흡 6개(13%), 미흡과제 3개(7%)로 나타남
 - 우수 과제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및 통합법체계 마련」,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6개 관리과제이며, 미흡 과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제도 개선」,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3개 관리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9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109%로
 - 89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4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목표 미달성은 이용자 피해구제의 민원처리 만족도와 사이버 폭력지수 등으로 '08년도의 경우 정치적 관심 및 비판적 여론이 적극적으로 형성되는 경향 속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시위 등 이슈들에 대한 사이버 상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07년에 비해 악성 댓글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등 외부적 요인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및 통합법 체계 마련」 및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6개 관리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으로 새로운 융합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정비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법 체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방송통신 발전 및 수평적 규제체계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방송시간의 75%)을 성과지표(목표치)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청,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TV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매출 증대(TV홈쇼핑 중소기업 매출비중 73.5%→74.1%)라는 정책 효과를 거둠.
 - 신규 영어 FM 방송도입은 국내 거주(방문)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주체로 설정하여 해당지역 거주 외국인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익성이 없는 영어 FM방송을 안정적으로 제공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 조사와 전문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기존 방송분야 재정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적합한 재정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원배분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목표 대비 139%의 초과성과를 거둠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하여 저소득층 가계통신비를 20%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수혜자가 '07년말 73,707명에서 434,552명으로 증가(490%)하는 성과를 거둠(자료: 전자신문, '09.1.8. 6면).
 - 방송통신 금지행위 법·제도개선과 조사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지행위 사전처리 지침, 사건 유형별 조사매뉴얼 마련, 조사기법 체계화 등을 확립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감소시키는 성과와 방송통신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함.

(3) 개선 · 보완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의 3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제도 개선」은 법령개정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목표달성도 및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미흡으로 평가되었음. 향후에는 법령 개정절차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및 협의 필요
 -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는 ①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에 있어서 민원처리 만족도가 38.4%로 목표치인 53.4%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이에 대하여 CS센터 민원처리 인력의 충원으로 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민원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송통신민원처리지침 제정 필요
②이용자 재정건 처리기간 단축은 258% 달성했다고 하나 현재 목표치가 75일로 높은 편이 아니며 현재 달성일수인 29일은 타 분쟁조정기관(혹은 상담기관)과 유사한 기간으로 평가되었음. 이는 현재 모든 재정사안을 방통위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어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내 분쟁조정원 및 주요 외국의 ADR(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등을 참고하여 과오납 요금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소하고 반복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용자 네트워크국장에게 알선분과위원회 구성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기간 단축하는 개선방안 검토.
 -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은 외부요인에 의하여 추진일정이 대폭 감소하여 정책과제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시청자 참여의 정의가 미흡하여 향후 시청자 참여 확대 정의를 방송통신의 양방향 융합 환경하에서 기존의 지상파 및 종합유선방송 시청자와 새로운 환경인 IPTV, DMB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시청자의 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자 참여 정의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 평가결과 종합 >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및 통합법체계 마련	우수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구축	우수
방송통신분야 R&D 재원확보 및 추진 체계 재정립	보통
IPTV 상용서비스 활성화	보통
공정경쟁 및 균형발전 방안 마련	다소미흡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보통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제정	다소우수
디지털방송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보통
해외시장 진출 기반조성	보통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	보통
이동멀티미디어 (DMB) 활성화	보통
방송시장 소유·경영 규제 개선	다소미흡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다소우수
공영방송 위상 정립	다소미흡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	보통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우수
신규 영어 FM방송 도입	우수
지역방송 활성화 추진	다소우수
방송광고 규제완화 정책방안 수립	다소우수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제도 개선	보통
방송광고 법규준수 관리·감독 강화	다소미흡
방송편성의무비율 준수여부 감독	보통
방송평가제의 내실화 추진	다소미흡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시행	다소우수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	보통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선	우수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제도 개선	다소미흡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	다소우수
전파자원의 이용 활성화	보통
주파수 공급 확대	다소우수
다양한 방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보통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지원	다소우수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다소우수
무선국 운용 규제완화	보통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	보통
인터넷 침해 위협으로부터 안전성 제고	다소우수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다소우수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보통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다소우수
인터넷 이용 활성화 지원	다소미흡
이용자 보호시책 강화	보통
공정경쟁 확립을 위한 시장감시 강화	보통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미흡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 보완 및 조사체계 확립	우수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주권 확립	미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기회 확대 및 미디어교육 내실화	다소우수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및 통합법체계 마련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방통융합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법 체계 정비의 큰 틀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 마련
 - 방통위 출범으로 물리적으로 조직은 통합되었으나 새로운 융합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정비는 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음
 -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통위 출범과 동시에 통합법제화 작업을 진행하여 전문가 TF를 조기 구성·운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추진 역량을 발휘
 - 방송과 통신의 사회문화적·역사적 차이를 인정하여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하지 않고, 단계적(기본법+사업법)으로 통합법제화 작업을 추진기로 한 것도 합리적 판단이었음
-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원활히 이견을 조율하여 추진 일정의 지연 없이 목표 달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 주요 내용 중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등은 부처간 이해가 첨예한 사안이었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무난히 합의를 도출
 - 충분한 사전계획과 업무관련자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예기치 못한 일정지연 사유의 발생을 최소화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된 통합법 TF 회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통합법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방통위 출범 원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성과를 냄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법 정비는 방송통신융합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나, 방송과 통신 양 분야의 지향가치가 상이(공공성 vs. 산업성)하고 다수의 이해조정이 필요하여 난이도 높은 과제임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융합추진 백서 및 통합법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 TF 운영 등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을 충실히 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출범 초기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TF구성·운영,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일정 충실히 수행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부, 지경부, 기재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통합기금설치, 콘텐츠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등 난제 해결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법 정비 기본계획 및 기본법으로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부안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수평적 규제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사업법’ 추진의 발판 마련

(1) 평가결과 종합

- 기금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 체계 구축 관련 적절한 성과 지표 설정
 - 국정과제 추진에 기금 재원이 실제 배분되는 정도와 방송통신 위원회라는 통합 조직에 적합한 재정체계 설계 여부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성과지표 제시
-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대내외 협의 노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이행과정 적극 추진
 - 국정과제 추진 소요 자원 배분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회 등과 적극적 협의 노력을 추진하여 관련 성과목표 달성
 - 독립적 전문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 연구용역 수행 및 관련 해외사례 수집 등 방송통신 재정체계 정비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사례 조사 등을 충실히 이행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확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 긍정적 정책 효과 기대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기반 확충, 방송통신 및 융합분야 발전을 위한 적절한 재정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에 적극 기여
 - 방송통신 재정체계 정비방안 수립을 통해 기존 기금 징수제도를 점검하고 정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규제개혁 도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과제 소요 자원배분 비율이 목표 대비 139%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기금운용계획, 방송통신 재정체계 정비방안 수립 등 목표 100%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배분 비율을 전년 대비 2%p 높게 설정하는 등 적극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통신재정체계 정비방안 수립’이라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표 제시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연구원 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사전조사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업계 이해관계 수렴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다소 미흡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의 적절한 협의 노력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 목표 달성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근거 마련, 국정과제 추진 재정 기반 확충 등의 정책 효과 발생

(1) 평가결과 종합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으로 재정비가 필요했던 방송통신 기술 R&D 분야의 재원확보 등 R&D 추진체계를 정립
 - 방송통신분야 독자적 R&D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방송통신 R&D 추진전략(안)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분야 R&D 운영체계를 정립하는 성과를 거둠
- 관계부처 협의, 면밀한 조사분석,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 등 전방위적 의사소통으로 원활히 목표 달성
 -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발굴 및 활성화 등에 방송통신분야의 R&D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원배분 등 방송통신분야 소관 R&D 재원을 확보
 - 미래 방송통신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기술 수준 파악 및 발전 추세를 전망함으로써 방송통신 기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면밀한 조사 분석 실시
 - 안정적 재정계획 및 면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산·학·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송통신 중장기 R&D 기본계획(안) 마련
- 향후, 분야별 R&D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의 안정적 재원확보, 중장기방송통신R&D전략안을 수립 등 목표 100%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흥기금배분 협의, R&D전략 수립은 R&D 추진체계 정립을 위한 대표성을 지니는 성과지표로 판단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분야별 조사분석 및 내외부 TF구성·운영은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계획수립 이전에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강화할 필요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배분관련 협의 완료 등 추진일정 준수에 충실하였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R&D 전략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R&D 추진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방송통신 R&D 추진전략(안)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분야의 R&D 운영체계를 정립하였음

(1) 평가결과 종합

- 기술적 기반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입법지연으로 수년간 도입이 지체되어 온 IPTV 상용 서비스 본격 개시
 - 방통융합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IPTV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기반 조성
 - IPTV는 「서비스-콘텐츠-네트워크-기기」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 전반에서 선순환 발전을 유도하고 융합산업의 각 분야에 미디어 관련 새로운 유망직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 IPTV 법, 동법 시행령 및 고시 제정으로 법·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사업자 인허가를 거쳐 원활히 상용 서비스 개시
 - IPTV법 시행령과 허가·회계·설비 고시(8월) 및 IPTV 사업자의 기술적조건 등에 관한 IPTV 기술기준 고시 완료(10월)
 -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IPTV 제공사업자 최초 신규허가(08. 9월) 및 IPTV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08. 8. 26일 이후 계속)
 - IPTV 시험서비스 시행 및 품질점검('08. 10월~12월)을 거쳐 IPTV 상용서비스 개시('08. 11. 17일) 및 기념식 개최('08. 12. 12일)
- IPTV 공공서비스 발굴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 및 민간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IPTV 서비스 활성화 토대 마련
 - 국가기록원, 강원도청 등 9개 기관의 IPTV 공공서비스를 발굴하여 600여 가구 대상의 시범서비스 제공
 - IPTV 상용서비스 출범에 맞추어 정부와 민간의 교량역할과 협조 체제 마련을 위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출범(10월)

□ IPTV 서비스 도입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법령 제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과정에서 추진 일정이 계획대비 일부 지연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IPTV 85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137건의 채널을 확보하는 등 100 % 목표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전문기관(ETRI)의 산업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IPTV 가입자수를 설정하였으나, IPTV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요구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IPTV 서비스이용행태 조사 실시, 사업자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실하였음.
4. 추진일정의 충실성	90%	· 4개 추진 계획 중 2개 정상추진(50%) 되었으나 연내에 지연된 사항이 모두 완료되었음.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으로 지연사유 감안 ※ 향후, 사전적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민관 협조체제, 부처간 협조체계 등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일정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 필요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 교육부와 18회, 경찰청과 10회 업무협의 등 충실하였음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신규미디어인 IPTV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기존의 방송시장과 생활의 패러다임 변화 유도

(1) 평가결과 종합

- IPTV 등 융합형 신규 매체 등장에 따라 케이블방송 등 유료 방송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정경쟁 및 매체간 균형발전’ 이슈는 매우 중요한 정책 사안임
 - 과제 선정 및 성과목표 설정이 적절하고 목표를 100% 달성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이 부족하였고, 과제별 추진 일정 준수가 다소 미흡
- 방송통신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치의 적극적 달성
 - IPTV 대기업 진입기준 완화, 제공사업자 허가기간 연장 등 IPTV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장규제 5건 개선
- IPTV 등 방송통신융합 신규매체 등장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결합판매시장의 공정한 정책 개발을 위한 토대 마련
 - 방송통신융합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방송서비스의 다매체화 및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경쟁 이슈 분석, IPTV 가치사슬 및 경쟁전략 분석 등의 연구 수행
- 향후,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여 일정의 지연 없이 과제 수행 필요
 - 또한, 방송통신융합시장의 경쟁상황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정경쟁 및 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하여 적극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TV 관련 규제를 5건 개선하는 등 목표 100%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선 목표치 5건은 타 부처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목표설정이며, 방통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적절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은 적절히 수행되었으나, 관련 통계 현황이나 사례분석을 통한 사전조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추진 계획 중 1개 정상추진(50%) 되었으나, 연내에 지연된 사항이 모두 완료되었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적절하나, 타 매체·타 정책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매체간 공정경쟁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토대 마련

(1) 평가결과 종합

- 방송통신융합을 확산·촉진하기 위해 융합서비스의 내용인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효과적 추진체계를 모색, 이견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등 방송통신콘텐츠 활성화의 토대 마련
- 방송콘텐츠 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08.12월)
 - 동 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3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12년까지 총 5,642억원 투자)
 - ※ 방송콘텐츠 제작부문의 경쟁력 강화(5개 과제), 방송콘텐츠시장 투자활성화(4개 과제), 방송콘텐츠산업 발전기반 확충(2개 과제)
 - ※ 총 6조원의 시장창출 및 1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 기대
- 방송통신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방송통신 콘텐츠 사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공익·공공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지원
 -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활성화 제고와 일반인에게 웹상에서의 다양한 콘텐츠 접근기회 제공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방송통신 콘텐츠 유통시스템과 DB를 구축
 - ※ 디지털유료방송 콘텐츠 유통시스템 26%(목표대비 100% 달성) 구축 및 방송 콘텐츠 DB 100% 구축
- 향후, 방송통신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콘텐츠 활성화 기반마련이 절실히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 제도 개선 등 제시된 3개 성과목표 100%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콘텐츠의 다양성확보와 사업자의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대표적 지표라고 판단됨 ※ 향후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하여 법,제도 개선사항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 외국의 추진사례 조사와 총 9회의 TF회의 개최 하는 등 의견 수렴에 충실하였음
4. 추진일정의 충실성	90%	· 2개 추진 계획 중 1개 정상추진(50%) 되었으나, 연내에 지연된 사항이 모두 완료되었음. ※ 방송영상콘텐츠 업무 소관에 대한 문화부와의 협의 과정에서의 지연 사유 감안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 실·국장급 정책협의회 구성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노력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나,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하여 ‘콘텐츠 진흥TF’를 구성하는 등 정책의 추진력, 책임성, 일관성을 담보하는 추진체계 구축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완료

- 2012년말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제정('08. 3.18)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담아 제정·공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디지털방송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할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절차,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 및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안, 대국민 홍보방안 및 시청자 지원근거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관련 해외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통한 관계기관과의 의견 수렴 등을 시행하여 디지털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

< 디지털전환특별법시행령 주요내용 >

- ①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절차
- ②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 ③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른 시청자 보호와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방안 및 시청자 지원 근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로 설정한 입법예고, 규제위/법제처 심사, 시행령 공포·시행 등의 입법절차를 단계별 절차와 기간 등을 준수하여 성과지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의 입법절차 규정에 따라 입법을 위한 각 단계별 과정과 기간을 지표로 설정하여 성과지표 설정의 적극성과 대표성이 적정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현황과 사례를 수집하여 입법을 위한 참고 및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일반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계획수립의 적절성을 확보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의 입법절차 규정에 따라 입법을 위한 각 단계별 일정을 준수하여 추진계획을 준수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통하여 시행령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제고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범국가적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디지털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디지털전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인지도와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을 제고함으로써 디지털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음

(1) 평가결과 종합

□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범국가적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

- 디지털전환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으로 디지털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실행할 중장기 계획인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디지털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디지털방송활성화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로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디지털전환 특별법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함
-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 등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할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위원 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약 1개월 지연되었으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기본계획 주요내용 >

- ① 아날로그방송 종료, ② 홍보 및 시청자 지원, ③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④ 제작·송신·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 ⑤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⑥ 디지털TV 수상기 보급, ⑦ 디지털방송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⑧ 재원확보 및 지원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로 설정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방송활성화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하는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디지털전환 추진의 중장기 계획인 디지털방송활성화 기본계획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짐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해외 사례와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자체 (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로 정책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디지털전환에 따른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실히 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추진위 구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1개월 정도 지연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을 참여시켜 관련정책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관련정책과 연계성을 가지도록 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디지털방송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범국가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1) 평가결과 종합

- 해외진출 기반 조성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및 한류 콘텐츠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첨단서비스와 유망콘텐츠 수출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
 - WiBro, IPTV 및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거점지역과 전략적 유대를 강화, 방송통신 수출 확대에 경제성장에 기여 필요
- 지정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각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등 우리 방송통신 산업의 해외진출을 꾸준히 확대
 -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조직개편 등의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목표치를 초과달성
 - 수혜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만족’이상에 해당하는 8.62점(10점 만점)의 목표를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 사전에 시장조사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 및 정부 정책과 연계 도모
 - 전략국가의 주요 관심품목조사와 시장조사, 전문가 연구결과 및 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 사전에 철저한 조사 분석 실시
 - 진출 유망국가 중 기 교류국가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방송통신 기업의 해당 국가 진출 기반 강화
 - IPTV · WiBro F/S 타당성 조사 및 파일럿 프로그램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력과제를 개발하고,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도 일방적 진출에 그치지 않고 공동제작 등 상호교류 방안을 아울러 모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개편 등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치를 상회하는 101.4%의 초과달성을 기록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족도 조사는 결과지표로서 적절하나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요구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저한 조사분석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여 정책목표치를 초과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둠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계획한 바대로 과제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여 100% 계획달성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의 해외진출 관련 다양한 기관과 방송통신 사업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증장기적으로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이 많음

(1) 평가결과 종합

- OECD장관회의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 지원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기구 의제대응에 크게 기여
 - 총 5회의 국제행사를 개최(OECD장관회의, KANZ, WICS 등)와 총 17회의 국제회의/행사(해외) 참가를 통해 국제협력분야에서 우리의 방송통신 정책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
 - ITU 표준부문 의장단, APT 관리위원회 의장, OECD 정보통신 정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부의장 등 국제기구 의장단 진출을 통해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에 기여
- 국제기구 활동지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향후 방송통신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국제기구 및 행사환경의 악화를 고려하더라도 전년도 수준(0.82)과 동일하게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목표치 상향 조정 필요
 - ITU, UN ESCAP APCICT, WB 등 방송통신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협력사업의 점진적 확대 필요
- ※ 한-AfDB MOU 체결('08.10월)을 통해 AfDB와의 중장기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 활동지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향후 방송통신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사업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함 ※ 한-AfDB MOU 체결('08.10월)을 통해 AfDB와의 중장기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 활동지수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국제기구 활동지수는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활동강화에 대표성을 지니는 성과지표로 판단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년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현실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OECD장관회의가 10년만의 행사여서 불가피한 사유 인정 전문가 pool 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적절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계획에 환경변수를 고려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충실히 준수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장급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과장급 홍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적절성 인정 고위급회의나 장관급 국제회의 개최 등 실적 우수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장관회의 개최 및 ITU Telecom Asia 참가를 통하여 방송통신 강국 이미지 확산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계획 수립시 사전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사업자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이 인정됨
- 또한, 3개의 추진계획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중 채널운용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은 12월에 공포·시행됨으로써 추진일정에 다소 지연이 있었으나, 법령개정 특성상 추진에 여러 변수가 있었음
-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DMB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과제로서 국내 사업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정책방안을 추진함
 - '09년 VIP업무보고시 방통위는 WiBro, IPTV, DMB의 해외 진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보고
 - 서비스 도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방송망 구축 지원
 - 현재 보다 채널이 2배로 증가하는 차세대 지상파 DMB 기술개발 및 실험방송 ('09. 5)을 통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
- 종합적으로 DMB 규제 정비와 지원정책 마련 등 당초 계획했던 정책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함으로써 향후 정책집행시 DMB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DMB 채널운용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목표 달성('08. 12월)
 - 수익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DMB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08. 12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시행령 개정, DMB 지원정책 마련의 목표가 충실히 달성되었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수천억의 적자가 쌓인 DMB 사업의 어려움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에 비해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으며 구체성도 갖춰짐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DMB사업자에 대한 채널운용 규제는 대표성이 부족하나, DMB 지원정책 마련은 DMB 활성화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대표성 인정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파악이 이루어졌음 · 관련사업자 의견정취, 정책연구반 운영,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충실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추진계획이 정상 추진되었음 * 다만, 채널운용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은 12월에 공포·시행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업대표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이 충실히 수행되었음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를 달성하여 정책 집행시 DMB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평가결과 종합

- 방송시장 소유규제 개선책으로서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언론 관련법으로서 각 사안별로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이 뚜렷한 특징이 있기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음
 -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완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규제완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소유·겸영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이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시대상황에 맞는 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수립하기 전에 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하여 깊이 있는 검토를 하였으며,
-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제된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단체의 반대로 공청회가 파행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이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재 개최를 추진하였으나 또다시 파행된 바 있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한 바 있음.
- 이후에도 전자공청회,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을 준비하였으나 국감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보완 요구 및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점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대상 설명일자

: 한나라당 (11.10), 민주당 (11.21), 선진창조모임 및 비교섭 단체 개별 설명 (11.11, 11.14, 11.25)

□ 과제추진 계획 일정('08년 9월말)보다 다소 지연되어 시행('08년 12월말) 되었고, 매체시장과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했던 점을 고려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개정이란 목표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시행령개정이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방송시장 소유겸영 규제개선정책의 대표성을 100% 확보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움.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례 등을 폭넓게 조사하였음 · 정책에 반대의견을 지닌 이해관계자, 특히 언론 학계 및 방송노조/시민단체 측 의견수렴, 정책홍보 과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 추진일정의 충실성	80%	80% 준수 (* '08.12월말 기준으로 모두 완료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 관계부처 협의, 국회 문방위 이외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강화해야 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형적으로 정책추진성과를 달성하긴 했지만 방송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효과차원에서 감점요인

(1) 평가결과 종합

- 현행 방송법상 미비한 공정 경쟁 규제 제도를 정비하여 방송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기초로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과제를 원활히 수행함
- 학계·연구계 등으로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방송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공정경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08년 공정경쟁 이슈 분석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
- 방송시장의 규제 도입이나 폐지 등 공정경쟁 정책 입안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제도 도입 추진
 -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IPTV법에 따른 IPTV사업 경쟁상황평가 관련 하위 법령 정비
- 향후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한 방송 산업 정책과제이므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및 추진방법을 보다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책의 목표를 IPTV 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이라는 과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자 함.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령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 마련 등 목표치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설정되었음 · IPTV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은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의 일부분에 불과함. 향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가 보다 포괄적이면서,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등이 수행됨 · 공청회, 제도반 운영 등이 이루어짐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처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부처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짐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단계에서 IPTV시장 공정경쟁상황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1) 평가결과 종합

- 방송사업자 구도, 방송시장 전반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방송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인 공영방송 위상정립은 지난 수십년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책연구보고서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음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을 위해서는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정책연구자료가 마련되어야 하며,
 - 이는 지난 수십년간의 논의과정 및 결과, 국내 공영방송 제도의 문제점, 해외 선진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분석을 통한 합리적 논거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음
- <공영방송 위상정립>은 08년도 신규 정책과제로서, 사업 초년도에 정책방향과 기초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정책자료의 마련은 성과지표로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것임
 - 공영방송 위상정립은 중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책과제로서, 위상정립의 기본방향, 방법 등이 결정되면, 세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예정임
- 공영방송 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주적 여론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공영방송 제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 논거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입법기관인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법률안과 입법일정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 위상정립 관련, 정책연구보고서 마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의 성과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 • 공영방송 위상정립이라는 정책과제가 연구보고서 한편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 없음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공영방송 제도 문제점, 해외 선진 사례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연구보고서 마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대로 준수하여 정해진 일정내 정상추진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성격상 관련기관과 연계한 정책방안 연구보다는 공영방송 제도에 대한 풍부한 사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방안 마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평가결과 종합

- 공익채널 운영실적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였으며, 2009년도 공익채널을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선정
 -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계획 대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목표 (90%)를 초과한 107%의 실적 달성
 -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채널 선정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6개 분야에서 11개 공익채널을 차질 없이 선정함
- ‘공익성 방송분야 및 공익채널 선정방안에 관한 연구’(2007)에 기초하여 2009년도 공익성 방송분야를 고시하고 공익채널을 선정하였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미흡하였음
 - 2009년도 공익채널 선정을 위해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부처 의견조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시청자단체, 케이블업계 등과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음
- 공익채널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향후 공익채널 정책의 타당성 등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요구됨
 - 공익채널을 포함한 의무편성 채널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공익채널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채널 선정 및 관리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해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계획 대비 실적 90%이상과 공익채널 선정을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나 공익채널이 운영계획대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향후 공익채널 제도 자체의 타당성 및 효과를 검토하는 과제를 포함시킬 필요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시 관련통계현황이나 사례조사를 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이 1회에 불과하여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공익채널 정책 수립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필요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을 정상적으로 준수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이 불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시청자단체, 케이블업계 등과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효과를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실적으로 판단하였으나 무엇이 공익적 프로그램이며 그 질이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음

(1) 평가결과 종합

-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충실한 사전조사를 기초로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여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둔 우수정책사례로 평가됨
- 중소기업 지원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비율(방송시간의 75%)을 성과지표와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 현황조사 및 각계 의견수렴 등 충실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중소기업 관련기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조사연구사업 추진을 병행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충실하게 이행함에 따라
 - TV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방송편성비율 목표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TV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매출 증대라는 정책 효과도 발생하였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방송편성비율이 연간 방송시간의 77.6%로 당초 목표.(방송시간의 75%) 대비 103.5%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지원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TV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방송편성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대표성 확보 목표치도 TV홈쇼핑의 방송 편성 중, 보험·금융상품(10%), 대기업 제품이 주류인 가전제품(소비자 구매의향 15%)을 제외한 나머지(75%)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하도록 적절하게 설정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조사 및 각계 의견수렴 등 충실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 대로 준수하여 정해진 일정 내 이행 완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관련기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연계체제를 구축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연구반을 운영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 확대를 통해 TV홈쇼핑 매출 중 중소기업제품 매출 비중이 73.5%에서 74.1%로 0.6% 증대하는 효과 발생

(1) 평가결과 종합

- 수도권·부산권·광주권 영어FM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수도권에서는 본방송이 개시되어 거주(방문)외국인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등 신규 영어 FM 방송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충실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동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주체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 거주(방문) 외국인의 실질적인 정보수요를 충실히 충족시켜 줄 토대를 구축하였고 아울러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영어 FM방송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과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허가절차의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허가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점이 높이 평가됨.
- 신규 영어 FM 방송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충실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향후 동 방송도입의 성과 내지 한계,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엄밀하게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신규 영어 FM방송 도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자 선정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목표치가 적정하게 설정되었으며 성과지표가 목표에 부합하게 확보되었음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관련 통계현황, 사례 등이 적정하게 조사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이 적정하게 수렴되었음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전반적으로 충실히 추진되었음. 향후 도입지역 확대 지역의 사업자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과 연계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추진되었음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수도권 신규 영어 FM 개국 및 본방송이 개시되어 수도권 거주(방문)외국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향후 정밀한 성과 평가와 도입지역 확대 필요성이 있음)

(1) 평가결과 종합

- 지역방송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 지역방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기초 조사를 충실히 실시하고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우수 정책사례로 평가됨
- 지역방송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시책의 심의·평가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지역방송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을 성과지표와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 현황조사 및 각계 의견수렴 등 충실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지역방송 관련단체(한국지역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사연구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계획된 일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 제반 방송정책 수립시 지역방송 관련 요소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방송사의 이해가 반영된 IPTV의 지상파 전국 송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방송 정책 수립에 기여하였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완료,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안) 마련으로 당초 목표를 100%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의 심의·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을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발전 지원 계획 수립이 중요하여 대표성 인정 ※ 향후,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08년은 본 관리과제 최초 추진연도임)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기초조사 실시 및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실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정해진 일정 내 이행 완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방송 관련단체(한국지역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와의 연계체계 구축 지역방송의 이해가 반영된 IPTV 지상파 전국송출 정책 수립 등 관련 정책과 연계 추진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반 방송정책 수립시 지역방송 관련 요소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방송의 이해가 반영된 IPTV의 지상파 전국송출 정책방안 마련 등에 기여 ※ 다만, 전반적인 정책영향은 관리과제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1) 평가결과 종합

- 방송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가 등장하고,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추세
 - 신기술을 활용하여 탄생한 광고기법에 대한 개념정립 필요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가상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고 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 완화 및 데이터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
-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등 충실한 정책 추진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신유형 광고 도입 및 광고규제 완화를 위해 방송광고의 유형·시간·횟수 등을 규정한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고시 등 법령개정 추진
 -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 취약매체 간담회 실시,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반 구성·운영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문화부 등 유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연계성 및 신뢰성 도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기술 발전을 반영한 광고기법의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및 규제완화 등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계획된 목표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안) 마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등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방송광고 규제완화의 대표성은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판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국내시장 현황 및 가상광고 등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였고, 취약매체 간담회 실시,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반 구성·운영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일정, 의견수렴 기간과 같은 외부환경 요인을 반영한 추진일정을 적절히 설정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 등 유관 부처와의 의견 조율 및 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성 확보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규제완화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 편성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임 ※ 다만, 현재 단기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효과를 관측할 필요성이 있음

(1) 평가결과 종합

- 현재 다양한 방송미디어, 채널별, 프로그램별로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편성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 지상파 DMB 등 뉴미디어 방송에 대한 편성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
 - 지상파 DMB 등 뉴미디어 방송 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완화 및 지역민방 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완화
 - 이번 편성규제 완화는 뉴미디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향후 전 방송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편성규제 재편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제도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해관계자 설득,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등 충실한 정책 추진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및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에 대한 대외적 법규효력을 지닌 편성고시의 개정을 목표로 함
 -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 현장방문 실시, 전문가 의견수렴, 조사연구사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연계성 및 신뢰성 도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 자율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에 대해 법규적 효력이 있는 편성고시 개정을 규제완화의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계획된 목표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성고시는 방송사에 대한 대외적 법규의 규정으로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편성규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음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성고시 개정으로 인해 지역민방, 지상파DMB 등 방송사와 관련 산업의 동향 및 통계를 조사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였으나, 다만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에 따라 의견수렴 기간과 같은 외부환경 요인을 반영한 추진일정을 적절히 설정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과의 의견 조율 및 협력을 통해 정부정책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성 확보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규제완화로 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과 지상파 DMB방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향후 방송산업 활성화의 기초가 된 정책임 ※ 다만, 현재 단기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렵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효과를 관측할 필요성이 있음

(1) 평가결과 종합

-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방송광고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필요
 -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광고 유형·시간·횟수 등 법규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광고시간·횟수 등 법규 준수 여부 등
 -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편성책임자 교육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유도
- 방송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청자 권익증진 기반 확립
 - 실태조사 횟수는 방송광고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방송광고 편성 자료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 3회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함
 - 다양한 유형의 방송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편성자료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실태조사 횟수를 분기 1회로 추진한 것은 매우 적절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위반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법규준수 필요성 홍보
 - 다만, 정부조직 개편과 모니터링 인력 미확보로 자료 분석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계획된 일정보다 완료시점이 지연되어 다소 미흡으로 평가 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 및 시청자 시청권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 법규준수 여부 실태를 충실히 조사하여 계획된 목표를 모두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법규준수 여부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 및 조사결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태조사 연 3회 지표는 대표성 및 적절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시 전년도 조사사례와 위반내역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방송광고 관련 실무자 회의를 계획시행 이후 실시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공백과 추진일정의 촉박 등으로 추진계획에 반영 미흡
4. 추진일정의 충실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의 방송광고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제재 조치 등 정책을 12월말까지 모두 완료 ※ 다만, 관련자료 분석의 어려움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다소 지연 완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케이블TV방송협회 등 관련 단체와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제도를 설명하고 준수를 독려했고, 관련단체를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등 정책의 연계성 도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법규준수 여부 관리는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임 ※ 다만, 사후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발생한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효과를 관측할 필요성이 있음

(1) 평가결과 종합

-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도록 하여 방송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방송영상산업 발전 등을 도모
 -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편성 분야별 법규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월간, 분기별, 연간)
 - 오락, 주된 방송분야,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외주제작물, 국내제작물, 해외 1개 국가 제작물 등 법규준수 여부
 - 편성비율 조사 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시정명령 등) 및 편성책임자 교육 등을 통해 법규준수 유도
- 방송편성 관련 법규 준수여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 준수 문화 확립
 - 법정 의무편성비율 지속 위반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 처분조치를 통해 방송분야에서의 법 준수문화 정착 계기 마련
 - 방송편성의무비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방송사 450여개 채널의 방송실시결과를 조사하는 등 방대한 편성자료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 다양한 유형의 방송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편성자료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조사 및 처분 주기를 분기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
 -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지상파DMB특별위원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의 문화적 다양성 보장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충실히 조사하여 계획된 목표를 모두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법에 의거, 월간·분기간·연간 의무편성비율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은 대표성 및 적절성이 충분히 확보된 지표인 것으로 판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은 위법사례의 지속적인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최근 3년간의 위반 통계현황 및 사례 분석(사전조사)을 통하여 목표치 설정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반영이 부족하나 이는 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이 방송법에 따른 조사 및 처분행위로 의견수렴 필요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의 '07년 3분기, 4분기, '07년 연간, '08년 1분기, '08년 2분기 법정 의무편성비율 조사 및 분석 등을 12월말까지 모두 완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 지상파DMB특별위원회 등 관련기관 및 사업자에게 법규사항을 설명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편성제도 및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 감독은 시청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방송영상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임 ※ 다만,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보다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영향을 관측할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허가·승인 대상 방송사에 대한 방송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 및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허가·승인 대상 사업자(154개 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실시
 - 2008년 방송평가 결과, 평가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점수가 75%에 달해 성과지표를 상회하여 목표를 충실히 달성
 - 2008년 방송평가 결과에 대한 일반 공개 실시
 - 방송평가 업무를 한층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를 8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등 방송평가제의 내실화 도모
 - 다만, 방송평가위원회 구성 시기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으로 인해 기존 방송위원회 소속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법적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검토에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다소 지연
- 방송평가제의 내실화 추진을 위한 「방송평가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연구」 실시
 - 「방송평가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 강남준 외 6인, 연구비 : 1억원, 연구기간 : '08. 9.~12) 실시
 - 당초 성과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연구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으나, 이후 연구 사업비를 확보하여 방송평가제 내실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 방송평가의 신뢰성·타당성·효용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에 실시한 「방송평가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및 2008년 방송평가 결과를 토대로 2009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방송평가 결과, 평가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점수가 75%에 달해 성과지표인 70%를 상회하여 목표를 충실히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평가 틀 내에서 일정한 평가점수대(70%)를 확보하겠다는 성과지표는 방송평가제 내실화와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 당초 성과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계획 수립 이후 「방송평가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방송평가제의 내실화를 도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방송평가에 적용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시 방송사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사업자 간담회 실시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4. 추진일정의 충실성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방송평가 실시와 관련한 일정은 12월말까지 모두 완료 ※ 다만, 기존 방송위원회 소속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법적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검토 등으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방송평가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방송평가 결과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여 방송사업자 인·허가 정책과의 연계성 도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방송평가 결과를 8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 및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 ※ 다만, 당초 성과 관리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계획 수립 이후 「방송평가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방송평가제의 내실화를 도모

(1) 평가결과 종합

-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라 함은 전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나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방송 프로그램이 모든 시청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임
 - 올림픽과 같은 주요 스포츠이벤트가 지상파를 통해 제공됨으로써 유료방송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필요
- 지정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통한 국민의 시청권 확보
 - 올림픽과 같은 주요 스포츠이벤트를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제정, 국민관심행사 고시 등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었고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을 국민관심행사로 고시하여 목표를 충실히 달성
 - 통계조사 및 사례분석, 관련부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정부정책의 연계를 도모
 - 올림픽 편성 분석을 통해 중복편성 부분을 순차편성으로 권고하는 등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정책방안 모색
 - 유료방송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도 모든 국민들이 올림픽 등 관심행사를 지상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시청권 관련 성과지표의 목표치인 국민관심행사 관련 고시, 규칙제정 등 등 목표를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해서는 규칙 및 고시 제정 등 제도도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성과지표가 타당하고 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었음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제도 조사, 전문가 연구용역 실시, 관련부처, 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관심행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다만, 계획수립 이전단계에서의 관련 통계, 사례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제2차 국민관심행사 계획수립 시 해외사례 조사 등을 충실하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국민관심행사 고시, 방송사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추진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부, 방송사업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의 중복편성을 순차편성으로 권고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어느 정도 보장

(1) 평가결과 종합

-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요금할인을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저렴한 결합상품 출시를 유도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함
 - 이동전화 가족형 할인제도 및 블랙베리 이용약관 인가 등을 통하여 절감형 상품 출시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이용자 선택권 확대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완화
 - 초고속인터넷과 시내전화 결합상품,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등 출시로 이용요금 10~20% 절감
- 그러나, 인가 등을 통한 소극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용자 이익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방향 및 업무추진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제도개선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절감형 상품출시 유도, 결합상품 할인을 인상
 -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선택권 개선 건수 목표치 6건에 대해 8건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제 완화 등 소극적 접근방식 외에 적극적 방식으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계통신비 절감의 방안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지표의 대표성이 다소 부족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다양한 국내 할인제도와 외국사례도 조사하였을 뿐만아니라, 결합판매 할인을 10→20%확대에 따른 요금수준 사전 분석으로 초기 시행착오 및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추진일정 보다 조기 추진함으로써 과제 시행 효과를 극대화 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인가에 앞서 관련 사업자와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요금인하와 관련 관계부처(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전문가(민간, 학계 등)로 구성된 결합판매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통신비 절감(완화)효과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수치 제시가 어려움이 있어 추후 절감효과 명시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및 통신비 부담 완화
 -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면 폭을 확대함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수혜자 ('08. 12. 31)

구분	'07.12월말	'08.12.31일	증감률
감면자 수혜자 수	73,707명	434,552명	490%

-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조사는 물론 직접 저소득층 이동전화 이용실태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하여 추진함
 - 종로구청과 협조하여 관내 19개 동사무소별 저소득층 대상자 방문 면담 조사 등
-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수혜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시행초기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시행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수혜자 대폭 증가
 -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정부예산 사용 최소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요금감면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을 완료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직접적 효과발생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고시개정 지표는 매우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관련 통계조사 및 실제 저소득층 이동전화 사용실태 조사 실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 및 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제도를 시행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된 추진일정에 맞추어 정상추진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금감면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 교과부 등의 저소득층 지원정책과 연계 수혜 혜택 절차 및 신청이 용이하도록 지자체 협조 및 관계부처와 협의체 구성 운영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수혜자 대폭 증가 - '07년 74만명 → '08년 434만명(589% 증)

(1) 평가결과 종합

- 통신·방송 융합 및 All-IP 시대에 대비하여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 제도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보편적역무의 적용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 이용약관 인가제 개선, 허가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 선불통화권 발행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 방통융합에 따른 금지행위 유형 보강 등을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부처와 협의(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계획되었던 시기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됨
 - 법령 개정 시 충분한 사전 검토,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 강화로 법령 개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2건 개정이 목표였으나, 1건이 법제처 심사중으로 통과되지 않아 목표 달성을 위한 추후 노력이 필요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과제를 법제 개선으로 확정하는 적극성이 돋보임 · 규제개선을 위한 근거 법령개정으로 대표성 인정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련 사례 조사를 통한 법령 개정 기초작업을 철저히 하였으며. · 관련 부처협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등 포괄적인 의견 수렴 및 반영
4. 추진일정의 충실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2건중 1건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일정 정상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며, 협조가 잘 이루어짐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요금감면 수혜자 증가(434만명)하였으며, 향후 더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1) 평가결과 종합

- 국민에게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WCDMA, WiBro, 인터넷 전화 등 신규통신서비스에 대한 활성화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급증과 서비스 대상지역 커버리지 확대 등의 괄목할 성장과 성과를 거둠
 - WCDMA 누적가입자 수 1,000만명 돌파, 서비스 커버리지 99% 이상 달성
 -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 296% 증가('07년 61만 → '08년 179만명)
 - 인터넷전화 품질보증제 실시, 번호이동성제 실시 등
- 향후 신규통신서비스의 지속적인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규제 완화와 투자유인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음성위주의 통신시장에서 벗어나 데이터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적극 추진
 -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 구축
 - 콘텐츠, 중계기 등 IT 중소기업의 성장여건을 조성으로 신규 통신서비스 창출 기반 구축 및 경기회복에 기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WCDMA 가입자 1,000만명, WiBro 커버리지 25%, VoIP 가입자 179만명 등 목표대비 212% 초과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통신서비스의 시장점유율, 가입자 수 등으로 목표 설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였으며, 활성화 결과의 계량적 산정 등의 대표성이 인정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사례분석,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기술방식 등 사례분석을 실시 신규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학계,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평가 의견 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된 추진일정 보다 조기 추진함으로써 과제 시행 효과를 극대화 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통신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품질평가를 위해 방통위, 품질평가협의회, 정보통신기술협회가 연계하여 추진 VoIP 활성화 협의회, 전담반 구성 운영하여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WCDMA, WiBro, VoIP 가입자 수 및 커버리지 확대 특히, 인터넷전화는 전년대비 293%(179만명)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임

(1) 평가결과 종합

□ 주요성과

-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수립
 - 정책협의회와 토론회,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 향후 신규 사업자 진입 등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으로 요금 인하 등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기대됨
- 2012년 디지털TV의 전환 완료에 대비하여 방송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디지털TV 채널배치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가용 주파수를 확보하고 전파자원의 활용도를 높임
- 주파수 사용승인과 지정 업무를 통해 국가적 행사 및 안보, 산업현장 등에서 필요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

□ 개선·보완사항

- 확정된 『DTV 채널배치 계획』에 따라 확보되는 여유주파수에 대해 수요 조사와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파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지정건수 및 주파수 사용건수 목표 100% 달성 • 민원인의 편의를 저해함이 없이 전파자원이용기회를 부여한 실적이 우수하고, 전파자원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 실적이 탁월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등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을 지표로 설정한 것은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 증대와 관련 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목표 설정임 • 다만, 주파수 사용승인 건수 목표치는 국제행사 수요 등의 변수를 감안할 때 일정한 추세치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 설정 및 산정에 있어서 해외 통계자료를 조사 발굴하여 이용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위해 정책협의회 2회 개최, 토론회, 전자공청회 등을 거치고 방송사의 공식의견을 수렴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회수재배치 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업무를 추진함 • 또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위해 주파수회수재배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3회), DTV 관련 주파수재배치에 관해서 방송사의 공식의견 등을 수렴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의 수립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 등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으로 요금 인하 등의 향후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기대됨 • 주파수 지정과 사용승인 실적으로 전파이용 수요가 있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정책영향이 발생

(1) 평가결과 종합

□ 주요성과

-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적시에 기술기준을 제·개정하고, 일상 생활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전파 자원 이용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둠
 - 국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항공·해상·위성업무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하고, 확정된 전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신속히 개정
 -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점등 제어용 10GHz대 무선센서 주파수를 신규 분배하고 무선설비용 기술기준을 제정
- 미래 이동통신 세계 시장의 선점을 위해 국내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제 표준화 회의의 국내 개최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
- 한·러, 한·일 등 국가간 위성망 조정회의로 향후 간섭우려 주파수의 사전 조정과 과학기술2호, 다목적실용위성5호 등 위성망의 국제등록을 통해 미래 위성용 주파수를 확보함

□ 개선·보완사항

- 국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분배 및 할당, 기술기준 제·개정건수 와 위성망 국제등록 및 조정건수 등 당초 목표를 100%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로 설정된 국제등록 조정건수는 국내만이 아닌 외국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조정업무이므로 최근 3년간의 평균치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것은 적극적인 설정으로 판단 · 국제등록 및 기술기준은 주파수공급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기에 대표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임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협회를 통해 산업계, 연구계 등의 수요를 사전조사하고, 관련 연구반 구성시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각계 의견수렴을 충실히 이행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간 정책의 연관성이 있는 중소기업청 및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업무를 추진 · 관련 기관 등과 협의회 및 워크숍 등을 13회 이상 개최하여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의 효율성을 높임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개정으로 무선기기 제조 및 서비스 시장 확대가 예상되나 국제등록 조정건수의 목표치 설정에서 다소 소극적임

(1) 평가결과 종합

□ 주요성과

-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국내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영어FM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확대 및 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 등의 성공적 추진기반 마련
-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하여 ITU국제표준으로 채택된 T-DMB 기술의 해외진출 확대로 방송통신 융합분야의 선도국가 이미지 제고 및 지원국과의 IT협력관계 강화
- 방송의 디지털화와 새로운 방송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이동 멀티미디어방송 욕구에 부응하고 디지털기기 산업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

□ 개선·보완사항

- 개도국 T-DMB 시범방송 관련 주파수 허가 및 방송개시 등의 절차와 소요시간이 국가마다 상이하여 예상치 못한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 지원대상국의 규제·서비스 환경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영어FM방송국 허가 목표치 2건에 대해 3건 (서울시, 광주시, 부산시)을 허가하여 150% 목표 달성 · 지상파DMB 커버리지 확대 목표치 70%에 대해 73% 확대하여 104% 목표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용주파수가 없는 상황에서 FM방송국 2국 허가 목표는 적극적인 설정이며 대표성을 확보한 성과 지표임 · 어려운 경영여건 상황에서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통한 DMB 커버리지 70%확대는 적극적 설정이나 전년대비 성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음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어권 국가들의 영어라디오방송 도입 실태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광역시·도 등을 대상으로 영어FM방송국 도입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DMB 산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과 국내 단말기 보급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추진의 지표 설정 및 정책추진 성과분석에 활용하였음
4. 추진일정의 충실성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영어FM방송국 허가 일정 지연은 부산영어방송재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보정으로 인한 것임 · 국가마다 주파수허가 및 방송개시 등의 절차와 소요시간이 달라 예상치 못한 해외 지상파DMB 실험방송 지연이 발생되었으나, 향후 지원대상국의 규제·서비스 환경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으로 개선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주파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용주파수 확보 및 영어FM방송국 허가를 위해 기존 방송사 및 국방부,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 산,학,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상파DMB 수신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이를 활용한 재난경보방송 전달체계 구축 협의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FM방송을 허가하고 지상파DMB 커버리지가 확대 되었으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효과는 저조함

(1) 평가결과 종합

□ 주요성과

- 통신해양기상위성 통신시스템과 위성항법지상국시스템 및 탐색 구조 단말기의 부품모듈 국산화를 통해, 국내 위성기술의 자립을 위한 위성통신 및 위성항법의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
-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주파수 이용 현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전파관리 기반의 과학화를 추진
- EMC기술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8건의 기술지원과 산업체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활성화에 기여
- EMC 제품에 대한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자원 및 기술을 지원하여 제품개발 기간을 5%이상 단축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와 전자파 노출에 대한 평가 기술을 확립하여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성기술 국산화율 목표 및 주파수 이용현황 DB 구축 목표를 100%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성시스템 부품모듈의 국산화율을 채택한 것은 국내 위성기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표 설정임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계획 수립을 위해 기 구축된 유사 시스템의 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용현황 DB 구축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기별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간 협력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협의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성 시스템의 부품모듈 국산화를 통해 국내 위성기술 경쟁력 제고 및 향상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책적 효과 발생 측정이 다소 어려움

(1) 평가결과 종합

□ 주요 성과

- 주파수 심사할당 기준을 완화하고 할당신청 자격 및 할당취소 시 할당대가 반환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할당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
 - 주파수 심사할당 시 심사하는 항목을 축소하여 주파수 할당 신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부담을 완화하여, 대가에 의한 할당을 할 수 있도록 대가할당의 심사 절차와 기준을 개선
 - 주파수의 독과점 방지 및 신규 이통사업자의 진입촉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사전에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라도 이용기간 도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할당취소된 경우에는 잔여할당대가를 반환 받을 수 없게 개선
- 경매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주파수의 시장가치 반영과 주파수 할당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과급효과가 크고 경쟁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서는 대가할당 방식외에도 경매에 의한 할당이 가능하도록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할당 심사기준 보완을 위해 전파법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주파수 경매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당초 목표대비 100%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년 동안 논의해 온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 여부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주파수할당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주파수할당심사기준의 보완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성과지표임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경매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사항 사전 검토 · 연구반 구성·운영, 연구기관의 연구, 이해관계자 세미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 경매제 연구반 구성 및 경매제 도입방안 마련 등 당초 추진일정을 충실히 이행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을 추진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파수할당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적은 인정되나 그 효과는 향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1) 평가결과 종합

 주요성과

-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혼신 발생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
 - 무선국 중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육상이동국과 휴대무선국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
-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허가·검사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
 - 방송국의 공적책임, 지역적·사회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국·표준시보국은 현행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고정국 등 17개국종에 대해서는 허가·검사주기를 5년으로 통일

 개선 보완사항

- 휴대무선국의 신고제 전환 및 고정국 등 17개 무선국의 허가·검사주기 재조정이 이루어 짐에 따라 국민의 편익 제고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나,
 - 허가·검사주기가 조정되지 않은 방송국 등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술적 영향 등이 미치지 않는 범주내에서 허가·검사 주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이동국 신고제 전환과 허가·검사주기 재조정을 위한 전과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여만개에 달하는 무선국의 검사주기 변경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이거나 신고제전환 및 검사주기 변경 대상 무선국종 수를 한정된 것의 사유 근거가 미약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사례 조사실적 및 주요 이슈 검토 실적은 인정되나 규제완화의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미진 ·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학계 및 무선국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법 개정안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입법이 다소 지연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 법령의 입법절차 규정에 따라 입법을 위한 각 단계별 일정을 준수하여 추진계획을 준수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관리소, 전파연구소 등의 개설 허가검사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통하여 시행령에 반영하여 정책의 신뢰성 제공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제 전환 및 허가·검사 유효기간 연장으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허가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

(1) 평가결과 종합

□ 주요 성과

- 방송통신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생산성·경쟁력 향상, 제품 적기 출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체계의 전면적 개편 추진
 - 기기의 위험정도·불량률·인명안전 관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
 - 신제품의 경우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항목만 시험한 후 출시 허용 등
- 방송통신기기 제조·수입업체, 시험기관,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 개선 보완사항

- 인증체계 개선 시 방송통신기기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및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 구체적인 정책효과 및 영향 발생정도는 개정된 전파법 시행 후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파법 개정안의 국회제출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인용하는 조문으로 인해 기본법 국회제출(12.19) 이후 국회제출이 가능하여 물리적으로 연내 국회제출이 어려워 계량적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법 개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인용하는 조문으로 인해 기본법 국회제출(12.19) 이후 국회제출이 가능하여 물리적으로 연내 국회제출이 어려워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정책은 입장이 상이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된 분야로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다고 판단됨 인증절차 간소화 등 인증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인증 유형 재분류가 필히 선행되어야 하므로 성과지표가 과제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있다고 판단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 전에 가인증 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조사, 기대효과 분석 등을 실시 방송통신기기 제조·수입업체, 시험기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로 입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을 수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외생변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충실하게 추진일정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식약청 등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및 협의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체계 개선 시 방송통신기기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및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정책효과 및 영향 발생정도는 개정된 제도시행 후에 평가 가능

(1) 평가결과 종합

- 주요 방송통신망 구간의 유해 트래픽 차단, 악성코드 은닉탐지 대상 사이트 확대 및 중소기업 침해사고 대응 지원 등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악성코드 감염재발률을 개선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로부터 안전성 제고에 기여
 - 인터넷 장애를 유발하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성코드 은닉탐지 대상 도메인 확대 등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
 - IPTV, WiBro 서비스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정책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선제적 정보보호 대응방안 마련
 - 해킹방어대회 및 정보보호 공모전, 인터넷 정보보호 온누리 캠페인 등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 ⇒ 정보보호지수 개선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수준 강화
-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터넷 역기능 증가에 따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
 - 정보보호 인프라, 기술, 제도 등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제고 대책을 추진하여 IT강국에 걸맞은 국제적인 정보보호 위상 확보와 인터넷 이용자 보호에 기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성코드 감염재발률을 성과지표 목표치로 설정하여 측정된 결과 113%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당초 목표 : 35% → 측정결과 : 30.8%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년간 하향 추세이지만,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인터넷 환경에도 불구하고 더 낮게 설정하고,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의해 달성가능한 지표임을 감안할 때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과 대표성 확보가 인정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시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과약이 충분히 이루어져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수행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보호지수 개선 및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 마련 등 정책효과가 발생했으나 인터넷침해 위협 감소의 실질적 개선효과는 불확실함.

(1) 평가결과 종합

-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가 64.3점(기업 61.8점, 개인 66.9점)으로 측정되어 동년 목표 대비 100% 달성
 - 이는 이용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규 준수 웹모니터링, 보안서버 구축 확대, 사업자 대상 현장점검, 노출 주민번호 점검·삭제,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 등 일련의 정책 시행에 따른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구현된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캠페인 활동, 보안서버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구축
 - 포털·쇼핑몰 등 2만 5천여개 웹사이트 대상 법규준수 웹모니터링, 아이핀 보급, 인터넷상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추진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
 - 사업자·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이용자 약 11만3천명, 사업자 약 1천명), 개인정보 클린캠페인 및 아이핀 보급 등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
 - 과징금제도 신설, 주민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성과지표(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는 64.3점으로 100% 목표를 달성(기업 61.8점, 개인 66.9점)하였으나, 기업 신뢰지수가 개인 신뢰지수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IT 관련 지수 증가율보다 높은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인정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시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다양한 통계(보안 서버 보급률, 주민번호 노출 건수 등) 및 사례조사를 하였으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8건)을 수렴하는 등 충실성이 인정되어 우수로 평가되었음
4. 추진일정의 충실성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계획된 일정대로 충실히 추진하였으나, 다만 법령 개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정에 따라 일부 지연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핀 보급과 관련하여 행안부와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통위 아이핀과 행안부 공공지핀을 연계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관련기관과의 정책 협조 노력이 돋보임에 따라 우수로 평가되었음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클린캠페인 실시에 따라 총 297,866명이 19,797개 사이트에 1,480만 건 회원탈퇴 신청, 민간 보안 서버 보급대수 목표대비 127% 초과달성 등 국민 및 사업자가 체감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영향이 매우 우수하였다고 평가됨

(1) 평가결과 종합

- 불법스팸 수신량의 감축을 통해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피해 발생 예방노력 강화에 기여
 -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정통망법 법률안 개정 및 불법스팸 사법경찰권 확보 등으로 전년대비 스팸 수신량 감소
 - ※ E-mail 스팸 수신량(4.5→2.1)(153%),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0.5→0.46)(108%)
 - 불법스팸 관련 수신동의철회 대행시스템구축 및 이용자 홍보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스팸 방지 대책 추진
-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강화, 포털 등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제도 실시, 인터넷 윤리교육 등을 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 기반 마련
 - 다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시위, 미네르바 사건 등 예기치 못한 국내의 정치, 경제상황은 폭력성 댓글 증가로 이어져 사이버폭력지수가 높아진 측면이 있으나,
 - 본인확인제 확대실시, 범국민 인터넷 윤리캠페인 전개, TV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인터넷 윤리교육 내실화 등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으로 사이버폭력지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팸수신량, 휴대전화스팸목표 2건은 달성하였으나, 사이버폭력지수는 연예인의 잇단 자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악성댓글이 급격히 증가하여 목표 미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폭력지수에 있어서 전년도 실적과 같이 35로 설정한 것은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으며,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인정되나 무선, 유선 가입률 증대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콘텐츠의 질에 따라 좌우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내용이 보충되어야 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유해정보 통계현황조사, 사례조사 및 법안 개정을 위해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그 실적이 인정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과제 시행 효과를 극대화 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경찰청, 행안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과제 수행이 가능하였음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정통망법 법률안 개정 조치 및 불법스팸 사경권 확보 등은 인정되나, 사이버폭력 관련 사업수행은 정책적 영향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됨

(1) 평가결과 종합

-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확대, Giga인터넷 시범도입 및 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품질의 광대역 융합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 이용환경을 조성
 - 기존 유·무선 가입자망의 BcN 가입자망 전환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하여 총 2,487만명('08.10월, 전년대비 97% 증가)이 고품질의 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BcN 가입자망 : 유선은 50~100Mbps(가구), 무선은 평균 1Mbps(가입자)
 - 약 200가구를 대상으로 Giga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서비스 및 기술 타당성을 사전 시험·검증하여 3DTV 등 실감형 방통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Giga인터넷 구축 기반을 마련
 - 유선 영상전화·영상회의 연동기준 및 IPTV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무선데이터 품질측정 S/W를 개발·보급하는 등 BcN 응용서비스의 확산과 품질보장형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
- 대용량·고품질의 융합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5년간('09년 ~'10년)의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비전 및 전략을 제시
 - 산·학·연 등 방송통신전문가가 참여하여 미래서비스 전망, 현재의 망 구축 이용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망 고도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방송통신망 구축계획을 수립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N 가입자망 달성도, 유선가입자율,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의 세 건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모두 100% 이상 달성(116%, 101%,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의 대표성이 인정되며, 첫 번째 지표는 상승 추세치 반영으로 간주(중), 두 번째 지표도 상승 추세치 반영(중), 세 번째 지표는 적극적 설정 인정(상)하여, 전체적으로 '중'으로 인정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시,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분석이 인정되며(4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실적 또한 인정됨(3건)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일정에 차질없이 수행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한 협의 실적이 인정됨(2건)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지표는 116%(71) 달성으로 추세치 이상 반영, 두 번째 지표는 추세치 반영으로 보통 이상 달성, 세 번째 지표는 우수하게 달성하여, 정책영향은 '우수'로 인정

(1) 평가결과 종합

- 인터넷미디어 제작·활용 교육을 통해 웹2.0 및 UCC 분야의 이용자 참여 저변을 확대하고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터넷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 24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넷미디어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UCC 제작·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등 인터넷미디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
 - 다만, 단순한 미디어 활용교육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인 미디어 기획·제작 함양이나 건전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제고를 위해 윤리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대상 학교의 확대가 필요
 - 유선인터넷과 같이 이용자가 원하는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접속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조성
- 인터넷을 통한 소액결제, 도메인실명제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
 - 통신과금서비스 고시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인터넷에서 소액의 콘텐츠를 구입하는 이용자의 피해 방지 등 권익을 보호
 -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도메인실명제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인터넷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교육 만족도는 목표치 70점 대비 87.6점이며, 인터넷서비스 관련 제도개선의 목표치 4건에 대해서도 달성되었으나, 무선인터넷활성화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최종 위원회 심의의결 부분이 미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가지 지표는 모두 신규지표이며, 인터넷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제도개선, 활용교육 등 대표성이 있는 지표로 인정되나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 이미 이를 잘 알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활용교육 시행은 실효성에 의문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타부처 통계 활용 및 해당 통계 조사 실시 와 지속적인 전문가,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등의 사유로 우수로 평가되었음
4. 추진일정의 충실성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과제는 대부분 일정내 완료 했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및 기재부 예산배정 지연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및 협의실적 인정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적 효과가 09년 상반기에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나 부분적으로 인터넷이용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1) 평가결과 종합

□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조성

-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통신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주의보 및 사업자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 신속한 피해 예방 및 이용자 권익 증진을 제고하였음
- 알기 쉬운 만화로 구성된 이용자 교육용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통신이용자보호 포럼 등은 이용자보호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행 노력으로 높이 평가됨
- 초고속인터넷의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사업자의 품질개선(SLA)을 유도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하였음

□ 성과지표의 목표는 100%이상 달성하였으나 사전적 피해예방을 위해서 이용자 교육용 콘텐츠 제공 목표건수나 피해주의보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만으로 다소 불충분하다고 평가됨

- 아울러, 국내·외 관련기관의 이용자보호정책, 피해구제 체계 및 지원기관 현황 등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통신서비스이용자 보호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전략 수립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콘텐츠 제공 건수, 가이드라인 제시 건수 등의 두 건의 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각 123%, 117% 달성으로 목표 달성이 인정됨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지표는 신규 지표로 상 수준으로, 두 번째 지표는 전년대비 10% 이상의 목표치 설정으로 상 수준으로 인정됨 · 일정부분 대표성 확보가 인정되나, 건수 위주의 지표보다 포괄적 지표 개발이 요구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C의 연두발표자료, Ofcom의 보고서 ‘Taking account of consumer and citizen interests’ 및 OECD 과학기술산업위원회 보고서 ‘소비자보호와 권익증진’ 해외 사례 사전조사 실시(4월) 인정됨 ·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통신이용자보호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이해 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점 인정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건중 5건은 일정내 추진 완료하였으나, 1건은 다소 지연되어 90% 이상 준수로 봄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 통신사업자(5개), 시민단체(경실련)와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에 관한 협조체제 구축 인정됨 · 시민단체(경실련)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12개 사항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공정위, 방통위, 통신사업자(5개)와 협의를 통해 7개 사항을 개선한 점 인정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에 중점을 둔 점을 높이 평가됨

(1) 평가결과 종합

- 방송통신시장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과 시정조치를 통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
 -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실태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7건)해 목표(4건)를 175% 초과달성하였으며, 사후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은 목표(4건)를 100% 달성함
 - 특히,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우려되는 시장(결합 판매)과 다수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과열이 예상되는 신규 서비스 시장(인터넷전화)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시
-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계현황이나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간담회 및 법률자문 회의를 실시하여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아울러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 법제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MOU (합의문)를 체결하는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 다만, 과제의 추진계획이 일부 외부 요인에 따라 지연되었고, 성과지표의 구성이 단순 건수 위주이므로 성과지표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고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는 방향 모색 필요성 제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모두 달성 -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건수(목표치: 4건) : 175% 달성(7건) - 시정조치를 통한 제도개선 건수(목표치: 4건) : 100% 달성(4건)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은 전년대비 100%이상 증가하여 설정하였고,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는 3건으로 많은 숫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전년대비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평가받음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사업자 위주의 간담회가 중심인 것이 제한적이고 주로 통신사 중심의 간담회가 각 주제별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음
4. 추진일정의 충실성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건은 일정내 추진하였으나 2건은 일부 외부요인에 따라 지연됨에 따라 90%이상 일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받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기관인 법제처, 공정위 등과 업무를 협의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성을 인정받음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달성치가 초과 달성되었음을 인정받음

(1) 평가결과 종합

- 민원처리 만족도가 목표 53.4%보다 낮은 38.4%를 달성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
 - 정부조직개편('08.2)에 따른 CS센터 인력 감축(15명→7명)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은 민원처리 만족도를 충족하지 못함
 - 또한, 계획 수립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과 분쟁접수 기관 등과의 실질적인 연계성 부족으로 추진성과 미흡

- '09년으로 이월된 「방송통신민원처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방송통신민원처리지침」 제정을 통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원 만족도 향상
 - 접수된 민원을 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민원처리기간 준수율로 변경
 - ※ 처리기간 내 처리율 : '08년 89.4%→'09년 100% 목표

- CS센터 인력 증원, 성과지표 현실화, 사전조사·의견수렴 등 계획수립의 충실성 보완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을 강화 추진
 - CS센터 인력증원으로 만족도 향상 도모 : 6급 4명('08.12.11)
 - 소비자단체·통신사업자·SO·PP협의회·학회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과 국내 공정거래 분쟁조정원 및 주요 외국의 ADR 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하고 분쟁의 사전예방을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 만족도’와 ‘처리기간 단축’ 지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지표는 72%, 두 번째 지표는 258% 달성 - 산술 평균하면, 86%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지표는 추세치 미반영이므로 하, 두 번째 지표는 전년대비 10% 이상의 목표치 설정으로 상, 평균하여 ‘중’으로 인정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기관의 의견수렴과 민원 및 분쟁 관련 기관의 처리 과정에 대한 사례조사가 부족하여 평가결과, 보통임 · 향후, 통신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민원 및 분쟁 처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조정원 및 해외 기관의 분쟁 처리 사례 참고, 업무 반영하여 개선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내 계획 추진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분쟁접수기관 등과의 공조체제 구축은 의미 있으나 실질적인 구축 내용은 미흡 · PP 사업자와의 2회 간담회만으로 관련기관과 협의가 불충분하여 다른 협의기관과의 확대 요구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처리 만족도 점수는 전년대비 하락, 재정처리 기간은 축소되었으나, 정책적 영향은 미비 함 단, 분쟁처리 관련 법제개선방안의 마련은 정책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1) 평가결과 종합

- 방송통신 금지행위 법·제도 개선, 조사업무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방송통신 분야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
 - 방송통신 금지행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 금지행위 사건처리지침 등 조사관련 고시·훈령(총7건)을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
 - 또한 신규과제인 사건 유형별 조사매뉴얼 작성(3건)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등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해외 자료 수집을 위해 기관방문(FCC, Ofcom 등)을 추진하는 등 사전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정책 수립 시 반영
 -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협의회,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충실히 진행
- 공정위, 美 FCC 등 국내외 기관과의 정책 협조 기반을 마련하고 통신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후규제 추진에 있어 협력체계 강화
 - 공정위와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MOU를 체결('08. 12월)하였으며,
 -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와 연계한 사후규제 국제세미나를 개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모두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개선·보완 방안(마련) : 100% 조사인력 전문기술 교육 횟수(목표치:8회) : 225% 달성(18회) 유형별 조사매뉴얼 작성건수(목표치:3건) : 100% 달성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 금지행위제도 개선방안, 조사매뉴얼 마련 및 조사인력교육은 모두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로 인정 조사인력 전문기술 교육 횟수는 전년대비 1회 증가를 목표로 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다고 평가받지 못하였으나, 조사매뉴얼 작성의 경우 신규사업을 목표로 설정하여 적극적이라고 평가받음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수립 시 Ofcom, FCC 등 해외 기관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통신사업자 협의회, 공청회 개최,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세미나 개최 등을 실시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조사,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이 충실히 진행되었다고 평가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별로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위와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사전 협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와 연계한 사후규제 국제세미나 개최, 통신사업자 협의회 구축·운영 등을 통해 사후규제 관련 기관, 정책과의 협의 실적이 인정되었음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모니터링 시행은 불공정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조사인력 교육 및 조사매뉴얼 작성을 통해 방송통신분야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방송통신 금지행위 제도개선 및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음

(1) 평가결과 종합

- 추진일정의 대폭 감소로 정책과제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
 - 목표치는 조직개편으로 공모사업의 사업추진기간 부족(약 3개월)으로 추세보다 작거나 축소하여 설정
 - 조직의 안정으로 2009년도 시청자참여활동 지원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과지표도 건수에서 전년대비 증가율로 수정하여 지표관리에 효율을 기함

- 시청자 참여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 병행
 - 시청자지원사업의 정책효과는 시청자 방송접근권 확대 기여에 있어 수치화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방송접근권의 정책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건수에서 연도별 증가율로 변경하였음

- 통신 및 융합 매체에 대한 시청자 참여 및 평가프로그램 변화 필요
 -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운용을 현재 지상파 및 위성방송, SO사업자뿐만이 아니라 2010년부터 IPTV, DMB사업자에게도 운용토록 할 예정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자 참여 편수, 단체 활동 지원 사업 건수,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사업자 비율에서 100% 초과 달성되었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치는 첫 지표의 경우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추세치보다 작게 설정되었으며(하), 두 번째 지표는 축소 설정(하), 세 번째 지표는 상승 추세치 미반영(하) 하였음, 다만 조직개편 등 외생 변수는 감안함 성과지표의 대표성은 지표 3가지 모두 건수 위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참여 내용이나 참여지원 규모 등 관련 지표를 더욱 포함한 지표가 필요함(중)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방송위원회 통계 조사는 인정되나 국외 유사 정책에 대한 사례조사가 필요함 시청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만큼 시청자 단체의 의견수렴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 건의 추진계획중 2건은 정상추진 되었고 1건은 위원회보고 일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감안함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내 방송평가 편성영역 평가항목 기준 설정 반영은 인정되나 관련단체와의 협의 실적이 미비함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치를 100%이상 달성했으나 지나치게 건수 위주이고, 정책과제 특성상 참여 및 지원 내용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므로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1) 평가결과 종합

-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및 자막방송 제작 지원으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
 - 청각 장애인용 자막방송 수신기 5,000대 보급으로 수신기 보급률 증가
 - 수신기 보급에 7.3억원을 투입하여 당초 목표 12.5%를 초과한 13.1% 보급률 달성(누적보급대수 30,087대)
 - 청각 장애인의 TV 시청권 향상을 위한 자막방송 제작비 지원으로 자막방송 편성비율 증가
 - 방송4사(KBS, MBC, SBS, EBS)의 자막방송 제작비 19.1억원을 지원하여 당초 목표 80%를 초과한 90.7% 편성
- 중학생용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청자 방송접근 기회 확대 및 미디어교육 이해도 증진
 - 미디어교육 시범학교 및 저소득층·다문화 가정 공부방의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19개 단체, 1.7억원 지원)
 - 방송기자재 및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미디어교육 수혜자 만족도가 당초 목표 80점을 초과하여 87점의 만족도를 달성
 - 시청자 방송접근 기반시설인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광주) 운영 지원(29.9억원 지원)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방송영상편집 교육,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성과 목표 달성(이용자만족도 88점, 이용자수 116,321명)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자지원 사업(미디어교육,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막방송수신기 보급률 : 13.1%(104.8%), - 자막방송 편성비율 : 90.7%(113.3%) - 미디어교육 수혜자만족도 : 87점(108.7%)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 88점(100%)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수 : 116,321명(193%)
2.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지표 중 3개 지표(수신기보급률, 센터 만족도, 센터 이용자수)는 추세치를 반영하였으나, 자막방송 편성비율은 추세치를 반영하지 못함 · 미디어교육 수혜자만족도는 적극적으로 신규지표를 설정하였으며, 5개 성과지표 모두 대표성이 인정됨
3.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방송위원회의 방송소외계층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0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 전문가 및 관련단체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일회성의 한계를 지님 ·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포럼 등을 구성 운영하는 등 의견수렴 방법을 좀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4. 추진일정의 충실성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정책수행상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등 정부정책과의 연계가 우수함 ·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실적은 인정되나, 향후 협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의 조치가 필요
6.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수신기 보급,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으로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 및 미디어교육 이해도 증진에 기여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 R&D 전략 수립 등에 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강화	○ 중장기 R&D 전략 수립 이전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이상 개최('09.3월)
○ IPTV 조기 활성화 추진	○ IPTV를 활용한 교육서비스, 공공 서비스 등의 활성화 추진방안 마련 ('09년. 3월)
○ 공정경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 필요	○ IPTV법 제12조에 의한 경쟁상황 평가위원회를 구성('09.3월)하고, IPTV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실시('09.12월)
○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09.12월) ※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향후 수립될 '방송통신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 향후 WiBro, IPTV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별 거점 국들과의 전략적 유대강화가 요망됨	○ WiBro · IPTV : 인도네시아(2월), 페루(3월), 터키(6월), UAE(10월), 우크라이나(11월) 등 9개 거점지역과 전략적 유대 강화 예정
	○ 방송콘텐츠 : 태국(2월), 러시아(5월), 헝가리(6월), 카자흐스탄(11월) 등 6개 거점 지역과 전략적 유대 강화예정
○ OECD 장관회의 개최 및 ITU Telecom Asia 참가를 통하여 방송통신 강국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였으나 향후 방송통신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사업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의 협력사업 추진 ('09.12월) ※ '08.10.28. 한-AfDB MOU를 체결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AfDB와의 협력사업 추진중
○ 공익채널 제도 개선	○ 공익채널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09.6월)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개정('09.8월) ○ 변경된 공익성 방송분야에 의한 공익채널 선정('0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영어FM방송 도입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영어FM방송 청취행태 및 도입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0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영어FM방송 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대전·울산권 사업자 선정('09.12월, 주파수확보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방송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편성규제 재편작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음악, 데이터방송 등에 대한 편성규제 완화 방안 검토('09.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평가제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08년에 실시한 「방송평가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및 '08년 방송평가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에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개정('09. 3~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시청권(국민관심행사)관련 통계, 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관심행사 고시관련 해외사례 조사('09.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 관계부처와 협의 지연에 따른 법안 심사 통과 지연 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공정위)와 원활한 협의 도출로 법안 심사 통과 및 국회 제출('09.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T-DMB 시범서비스의 본방송 전환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지원대상국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 및 모니터링('09.6월까지) ○ 양방향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장비 지원('09년 사업추진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 관련 후속조치 마련·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법 시행령 및 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 마련('09.10월) ○ 방송통신기기 인증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 및 영향 분석('10.6월)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 인터넷침해위협 감소의 실질적 개선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터넷신뢰지수 개발	○ 인터넷신뢰지수 개발('09.11월) ○ 인터넷신뢰지수의 성과지표 설정 적절성 검토('09.12월)
○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조성을 위해 장기적인 사업수행이 요구	○ 본인확인제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 활동 강화('09. 12월) ○ 이용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 인터넷 윤리캠페인 전개 및 윤리교육 실시('09. 12월)
○ Giga인터넷서비스 도입관련 시범서비스 모델 발굴	○ Giga급 선도시범망 구축('09.10월) 및 방통융합형 시범서비스 모델 발굴('09.12월) ※ 총 4년간의 사업으로 '09년도에는 기초적인 서비스 모델 발굴 후 지속 개선(고도화)할 예정
○ 인터넷미디어활용교육 확산	○ 인터넷미디어 활용교재 공식인정 도서 선정 추진('09.7월)
○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시행을 위한 만족도 증진 방안 마련	○ 재정규정 개정하여 알선 활성화 도모('09.2월) - 1천만원 이하 사소하고 반복적인 재정건에 대해서는 알선분과위원회에서 처리 ○ 「방송통신민원처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완료 ('09.3월) ○ 「방송통신민원처리지침」 제정으로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 ('09.3월) ○ 민원처리기간 내 처리율 향상 ('09.12월) ※ '08년 : 89.4% → '09년 : 100% 목표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시청자 참여의 정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므로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및 융합 매체에 대한 시청자 참여 및 평가 프로그램 변화 필요	○ 통신 및 융합매체 확대 운영 추진 - 현재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용을 지상파 및 위성방송, SO방송사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용을 IPTV, DMB사업자에게도 2010년부터 확대 운영 추진 ※ '09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마감('09.2.5)